

법령 II - 비상대비 및 재난관리 관계 법령**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시행령 포함)**

문 1.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비상대비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비상대비업무에 관한 기본지침에는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과 ‘비상대비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ㄴ.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기본계획안을 종합하여 집행계획을 작성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 ㄷ.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확정된 집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ㄹ. 시·도지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 시행계획을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ㄱ, ㄴ, ㄷ ④ ㄱ, ㄷ, ㄹ

문 2.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인력자원과 물적자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업체에 종사하는 중국 국적의 甲은 인력자원이다.
- ② 미국의 법령에 따른 기술면허를 취득한 대한민국 국적의 65세 乙은 인력자원이다.
- ③ 자연과학을 전공한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기업체의 연구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서 말하는 과학기술자에 해당한다.
- ④ 물적자원이란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 시에 활용하기 위한 물자와 업체로서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별표]에서 정한 물자와 업체를 말하는데, 동물사료는 물적자원에 해당한다.

문 3.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중점 관리해야 할 물자 또는 업체의 소관이 분명하지 않거나 2개 부처 이상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소관 자원관리 주관기관의 장을 지정한다.
- ②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중점관리대상자원을 지정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중점관리대상자원이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지를 조사해야 한다.
- ③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인력자원대상자,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게 지정해제 사실을 구두 또는 문서로 알려주어야 한다.
- ④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시·도지사는 5년마다 소관 중점관리 대상자원에 대한 점검 일정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점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문 4.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비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비상대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점관리대상자원으로 지정된 물자의 소유자에 대하여 자체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3개월분의 범위에서 필요한 물자를 비축하게 할 수 있다.
- ㄴ.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에게 물자의 비축을 명할 때에는 비축물자의 품목, 규격, 수량, 비축장소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 ㄷ. 비축하는 물자의 소유자는 그 비축물자의 품목·규격·수량·대체 및 관리상황을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매년 2월 말일까지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ㄹ. 비축대상물자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이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데, ‘국채(國債)의 제조에 필요한 자재’는 비축대상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문 5.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기본계획등의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으로 기본계획 중 다른 법령, 계획 또는 지침 등의 개정에 따라 용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의 승인을 거치거나 받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 ② 국무총리는 직권으로 기본계획 중 단순한 문구 수정 등 계획의 일부를 보완하는 경우에는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의 승인을 거치거나 받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 ③ 실시계획의 수립권자는 실시계획 중 인력자원 및 물적자원 등에 관한 통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하여야 한다.
- ④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은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의 실시계획 변경 명령이 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실시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안을 작성하여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문 6.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정부연습과 자체연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책임하에 해당기관의 전시대비계획을 검토·보완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 또는 수시로 지역별 또는 부문별 자체연습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자체연습은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2개 부문 이상에 걸치는 자체연습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연습의 방법·기간 등을 정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실시명령을 발령한다.
- ③ 정부연습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연습의 방법·기간 등을 정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실시명령을 발령한다.
- ④ 정부는 전시대비계획을 검토·보완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 또는 수시로 각급 행정기관의 상호 연계하에 정부연습을 실시하되, 군사연습과 함께 실시할 수 있다.

문 7.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비상대비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시·도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교육 참여를 요청하는 경우에만 비상대비교육의 대상자가 된다.
- ㄴ.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으로부터 비상대비교육에 대한 위탁교육을 요청받은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 ㄷ.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비상대비교육에 대한 위탁교육을 요청한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에게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ㄹ.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비상대비교육의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3년마다 비상대비교육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문 8.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훈련의 실시에 대한 설명으로 ㉠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 따르면 1개 부처의 부문에 관련되는 전국 또는 지역의 훈련실시명령은 (㉠)이/가 그 훈련의 방법·기간 등에 대하여 (㉡)의 승인을 받아 발령한다.
-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 따른 1개 부처의 부문에 관련되는 전국 또는 지역별 훈련은 그 훈련을 필요로 하는 각급 행정기관의 장이 인력훈련 부문에 대해서는 (㉢)에게, 물적자원훈련 부문에 대해서는 (㉣)에게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 | ㉠ | ㉡ | ㉢ | ㉣ |
|---------------|------|---------|----------------|
| ① 국무총리 | 대통령 | 행정안전부장관 | 국무총리 |
| ②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 | 국무총리 | 행정안전부장관 | 관계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 |
| ③ 국무총리 | 대통령 | 국무총리 | 관계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 |
| ④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 | 국무총리 | 국무총리 | 행정안전부장관 |

문 9.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비상대비업무담당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시·도 교육청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 ② 국무총리는 비상사태 대비를 위하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점관리대상업체를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대상 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
- ③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대상 업체로 지정된 업체의 장은 국무총리에게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추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소관 업체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에게 그 업무 수행에 관한 지도를 할 수 있다.

문 10.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훈련으로 인한 재산상 손실에 대한 보상 청구가 인정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훈련실시기관이 군부대인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을 말한다)

- ①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훈련에 제출된 물자가 훈련으로 인하여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원상태로의 회복이 어렵거나 그 밖의 사유로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자에게 그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
- ②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보상금액을 결정하고 보상금 지급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해야 한다.
- ③ 보상금액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보상금 지급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훈련으로 인한 재산상 손실에 대한 보상청구권은 손실을 입은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문 11.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행정안전부장관,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장 및 읍·면·동의 장이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보 기〉

- ㄱ.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력자원 등의 실태조사 및 신고에 관한 사무
- ㄴ.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른 기술에 관한 자격 등의 부여 또는 취소 사실 통보에 관한 사무
- ㄷ.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른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 협력 요청에 관한 사무
- ㄹ.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비상대비훈련에 관한 사무

-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ㄱ, ㄴ, ㄹ ④ ㄱ, ㄴ, ㄷ, ㄹ

문 12.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동시관리훈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부는 비상대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의료시설과 이에 종사하는 인력자원에 대하여 동시에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동시관리훈련의 경우 훈련실시명령은 물적자원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국무총리가 발령한다.
- ③ 시·도지사등은 훈련실시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인력훈련통지서와 물적자원훈련통지서를 발급하여, 훈련실시일 7일 전(훈련을 갑자기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까지 훈련대상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게 한꺼번에 직접 교부하거나 훈련대상물자 소유자의 거주지 또는 업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으로 하여금 한꺼번에 교부하게 하여야 한다.
- ④ 동시관리훈련통지서의 발급 및 교부의 경우에 시·도지사등은 훈련대상자의 거주지가 훈련대상물자 소유자의 거주지 또는 업체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에는 인력훈련통지서의 교부 결과를 지체 없이 훈련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문 13.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비상대비업무의 확인·평가와 비상대비 관계 기관 소속 직원의 파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비상대비업무 수행 실태를 확인·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전문가 등으로 이루어진 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고, 그 평가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비상대비업무 확인·평가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으면 비상대비책임기관과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에게 시정조치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비상대비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파견 기간은 비상대비 관계 기관과의 업무 협조와 연락을 위하여 파견되는 경우에는 훈련 기간과 그 전후 각 14일 이내이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비상대비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파견 기간은 훈련의 준비태세 점검, 지휘·통제, 기관별 진행상황 관리, 훈련 성과 분석 및 훈련 결과에 따른 전시대비계획의 검토·보완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파견되는 경우에는 훈련 기간과 그 전후 각 90일 이내이다.

민방위기본법(시행령 포함)

문 14. 민방위기본법령상 중앙민방위협의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민방위에 관한 국가의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민방위협의회를 둔다.
- ② 소방청장,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은 중앙민방위협의회 위원에 포함된다.
- ③ 중앙민방위협의회에는 서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2명을 두되,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국장이 맡게 되는 간사는 중앙민방위협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④ 중앙민방위협의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부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된다.

문 15. 민방위기본법령상 중앙민방위협의회 분과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중앙민방위협의회가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로서 민방위기획위원회를 둔 경우, 그 분과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된다.
- ㄴ. 각 분과위원회에는 분과위원장 및 관계 부처 4급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실무회의를 둘 수 있다.
- ㄷ. 중앙민방위협의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중앙민방위협의회 관장 사무의 일부를 분과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 ㄹ. 각 분과위원회의 분과위원장은 소관 민방위 업무에 관한 사항을 조사·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민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약간 명을 연구위원으로 위촉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실적에 따라 연구비와 조사에 필요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문 16. 민방위기본법령상 협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민방위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데, 국회사무총장은 중앙관서의 장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②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요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민방위대 동원을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급박한 사태가 그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지 않더라도 지방국토관리청장은 민방위대의 동원(動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민방위대의 동원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민방위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우정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지방우정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지방산림청장은 민방위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문 17. 민방위기본법령상 보상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민방위 대원이 교육훈련이나 훈련 중에 부상을 입은 경우 장애 보상금은 시·도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
- ② 재해 보상금 및 휴업 보상금을 국가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중앙 민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급한다.
- ③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어 임무 수행 중 부상을 입은 자가 치료를 받으려는 때에는 치료신청서를 읍·면·동장,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어 임무 수행 중 부상을 입고 1급 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 장애 보상금은 사망 보상금액과 동일하다.

문 20. 민방위기본법령상 교육훈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부친상으로 인하여 교육훈련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민방위대요원은 소집일 24시간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유예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민방위 대원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하려고 본인에게 교육훈련 통지서를 직접 교부하는 경우, 본인이 없으면 교육훈련 통지서를 직장 민방위대에서는 직장의 장에게 전달하여야 하고, 교육훈련 통지서를 받은 직장의 장은 이를 지체 없이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 ③ 교육훈련 통지를 받은 자가 교육훈련에 참가하지 아니하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충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데, 이 때 보충교육훈련통지서는 훈련 시작 24시간 전까지 교부 또는 송달할 수 있다.
- ④ 민방위 대원은 연 10일, 총 50시간의 범위에서 민방위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하지만, 3개월 이상 외국에 여행 중인 직장 민방위 대원이 교육훈련을 면제받으려면 소속 민방위 대장을 거쳐 관할 읍·면·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당해 직장 민방위 대원에 대하여는 읍·면·동장이 직권으로 교육훈련을 면제할 수 있다.

문 21. 민방위기본법령상 동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동원 명령을 받은 민방위 대장은 상황에 적합한 방법을 택하여 소속 민방위 대원을 정하여진 시간 내에 동원하여야 하는데, 서면에 의한 개별 통지도 가능하다.
- ② 민방위사태가 장기화되어 민방위사태를 수습하기 어려운 경우, 읍·면·동장은 동원되지 않은 민방위 대원에게 참여를 명할 수 있다.
- ③ 읍·면·동장이 동원을 명한 경우에 동원 명령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전시·사변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동원된 민방위 대원은 민방위 대장의 민방위 수행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문 22. 민방위기본법령상 응급조치와 그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주민의 피난, 인마의 통행, 철도·궤도·차량이나 그 밖의 교통 수단에 의한 사람 또는 물건의 이동과 등화 및 음향의 제한 또는 금지 명령을 하는 경우, 응급조치권자는 그 조치로 인한 손실을 판단할 수 있는 조사 확인서, 사진, 그 밖의 증거자료를 기록·유지하여야 하고, 관계 서류의 부분을 첨부하여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민방위상 지장이 있는 시설·물건이나 사업의 관리자·소유자 또는 사업주에 대한 시설 등의 개선·이전·분산·소개 또는 전환 명령을 하려는 때에는, 응급조치권자는 그 대상·지역·기간·방법·사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응급조치 명령서를 소유자·점유자·관리자 또는 사업주에게 발급하여야 하되, 응급조치 명령서를 발급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끝낸 후에 발급할 수 있다.
- ③ 민방위상 지장이 있는 영업 또는 그 밖의 업무의 금지·제한이나 민방위상 꼭 필요한 영업 또는 그 밖의 업무의 계속·재개 명령을 하려는 때에는, 응급조치권자는 미리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리거나 주민 2명 이상을 참관시켜야 한다.
- ④ 다른 사람의 토지·건물·공작물·시설·장비나 그 밖의 물품의 일시 사용 또는 임무 수행에 지장이 있는 장애물의 변경·제거 명령이나 조치를 하려는 때에는, 응급조치권자는 그 대상·지역·기간·방법·사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방송, 신문 게재 또는 게시판 게시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문 23.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민방위대의 임무만을 모두 고르면?

- ㄱ. 교통통제 및 등화관제
- ㄴ. 대피소의 설치
- ㄷ. 파손된 중요 시설물의 응급 복구
- ㄹ. 자체 시설의 보호

- ① ㄱ, ㄷ
- ② ㄴ, ㄹ
- ③ ㄱ, ㄴ, ㄷ
- ④ ㄱ, ㄷ, ㄹ

예비군법(시행령 포함)

문 26. 예비군법령상 직장예비군의 해체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해당 직장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 자격 기준을 갖춘 예비군 부대의 지휘관을 6개월 이상 임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할지방병무청장은 그 직장의 장에게 직장예비군을 해체하도록 명할 수 있다.
- ㄴ. 정기감사에서 최근 5년간 3회 이상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관할지방병무청장은 그 직장의 장에게 직장예비군을 해체하도록 명할 수 있다.
- ㄷ. 수임군부대의 장은 해당 직장예비군의 예비군자원이 예비군 법령에 따른 편성기준에 부족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직장예비군의 해체를 요구할 수 있다.
- ㄹ. 직장예비군자원이 예비군법령에 따른 편성기준을 초과하거나 부족한 기준이 6개월 이상 계속되어 해당 직장예비군을 편성한 직장의 장이 해당 직장예비군을 편성기준에 맞는 부대로 조정하거나 해체할 것을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신청한 경우, 신청을 받은 관할지방병무청장은 수임군부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해당 직장의 장에게 부대를 조정하거나 직장예비군의 해체를 명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문 27. 예비군법령상 비상근예비군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국방부장관은 비상근예비군 선발계획을 선발일 30일 전까지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 ㄴ. 장기 비상근예비군의 소집기간은 입영부대장이 연간 30일 초과 18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부대의 훈련계획에 따라 정한다.
- ㄷ. 단기 비상근예비군의 경우, 국방부장관이 매년 안보환경, 군 구조 개편 정도, 상비 병력의 연차적 조정 규모 등을 고려하여 3,000명 이하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정한다.
- ㄹ. 국방부장관은 예비역인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원을 받아 비상근예비군을 연 2회 선발하며, 정원에 미달하여 선발한 경우에는 수시 선발계획을 통하여 추가로 선발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ㄷ, ㄹ

문 28. 예비군법령상 예비군대원의 훈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군부대에 근무하는 군무원에 대하여는 훈련을 보류할 수 있다.
- ② 법률에 따라 국민이 직접 선거하는 공직 선거기간을 제외하고는 차관급 이상의 국가공무원도 훈련을 하여야 한다.
- ③ 국방부장관은 연간 20일의 한도에서 복무연차에 따라 연 150시간 이내에서 예비군대원의 훈련을 실시한다.
- ④ 예비군대원이 훈련의 보류원서 및 연기원서를 본인이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또는 본인의 고용주로 하여금 소속 예비군중대장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문 29. 예비군법령상 예비군 편성절차 및 예비군대원의 신상변동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육군참모총장 등 소속 기관장은 전역자의 전역인사명령서나 소집해제 인사명령서를 전역일 또는 소집해제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보내야 하고, 병무청장은 전역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이를 보내야 한다.
- ② 소속 기관장은 전역자의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확인하여 인사명령서를 작성하고, 인사명령서를 병무청장에게 보낼 때에는 공문서의 송수신 체계가 갖추어진 경우에도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 ③ 지방병무청장은 지역예비군대원이 거주지를 옮겼을 때에는 예비군 편성카드 및 관련 서류를 이전(以前) 거주지의 지역예비군 중대장으로 하여금 해당 예비군대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역예비군 중대장에게 보내게 할 수 있다.
- ④ 직장예비군이 편성되어 있는 직장의 장은 소속 예비군대원에게 전입·전출·퇴직·사망 등의 신상 변동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문 30. 예비군법령상 국방부장관이 동원을 보류할 수 있는 사람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향로표지정비 담당 공무원
 ㄴ. 해안무선국에 근무하는 정비사
 ㄷ. 항공무선표지소에 근무하는 사람
 ㄹ. 주한 외국군부대에 근무하는 종업원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ㄹ
- ④ ㄱ, ㄴ, ㄷ, ㄹ

문 31. 예비군법령상 예비군 소집통지서의 전달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수임군부대의 장은 사전에 소집통지서를 본인에게 전달할 경우 훈련소집일 5일 전까지 전달하여야 한다.
- ② 수임군부대의 장은 동원에 대비한 불시(不時) 훈련이나 점검을 하려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방문통보의 방법으로 예비군대원에게 소집통지를 하여야 하고, 동원명령 발령 당시 섬 지역에 있는 사람은 동원명령 발령 후 72시간 이내에 지정된 장소에 응소(應召)하여야 한다.
- ③ 세대주등에게 소집통지서를 전달하는 경우로서 소집통지서를 전달 받는 자가 본인이 선정한 소집통지서 수령인인 경우에는 수령에 관한 동의 없이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있다.
- ④ 예비군대원이 인터넷을 통하여 공시된 훈련 일정(훈련소집일은 휴일에 해당)을 알고 난 후, 훈련을 받겠다는 의사를 훈련소집일 3일 전까지 전자문서로 통지한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소집통지서를 전자문서로 전달한 것으로 본다.

문 32. 예비군법령상 벌칙과 관련하여 아래 사례에 해당하는 벌금형의 상한액을 모두 합하면 얼마인가? (단위: 원)

- ㄱ. 지역예비군대원 甲은 미국에 체류 중이라는 이유로 훈련 보류 원서를 제출하였는데, 체류를 마치고 2024년 4월 1일에 귀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4월 18일까지도 거주지 지역예비군중 대장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
- ㄴ. 예비군부대의 지휘관 乙이 소속 예비군대원을 상대로 그 지위를 이용하여 예비군대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 ㄷ. 동원명령을 받은 예비군대원 丙은 질병을 이유로 동원을 연기하였는데, 해당 질병은 丙이 동원 연기를 목적으로 거짓으로 꾸며낸 것이었다.
- ㄹ. 예비군 훈련에 소집된 동생을 대신하여 쌍둥이 형인 丁이 훈련을 받았다.

- ① 5,700만 ② 4,700만 ③ 4,500만 ④ 3,500만

문 33. 예비군법령상 (가) ~ (라)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긴급조치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사람이 보상을 받으려면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방부장관은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가) 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 보상금액을 결정하고 보상금 지급통지서를 (나) 신청인에게 보내야 한다. 보상금액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보상금 지급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다) 국방부장관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 재심청구를 받은 날부터 (라) 재심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가)	(나)	(다)	(라)
①	15일 이내에	지체 없이	30일 이내에	60일 이내에
②	15일 이내에	10일 이내에	60일 이내에	90일 이내에
③	30일 이내에	지체 없이	30일 이내에	60일 이내에
④	30일 이내에	10일 이내에	30일 이내에	90일 이내에

문 34. 예비군법령상 국방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수임군부대의 장이 필요한 경우에 경찰서장에게 다시 위탁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 ① 예비군의 임무수행을 위한 중대 이하의 예비군부대의 동원에 관한 권한
- ② 예비군대원 본인의 부재(不在)로 인해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은 같은 세대 내의 세대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통지서를 예비군대원 본인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지연 또는 파기한 경우에 세대주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
- ③ 무기·탄약·장비와 그 밖의 부속품 등의 유지와 관리에 관한 사항
- ④ 무장폭도의 도주도로 예상되는 지역에서 무장폭도를 고립시키기 위하여 전술상 다른 방법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황에서, 예비군의 작전지휘 및 작전상 필요한 긴급조치에 관한 권한

문 35. 예비군법령상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에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같은 동네에 사는 甲과 乙은 2021년 3월 8일에 있는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였다. 甲은 당일 훈련 종료 후 귀가 중에 부상(負傷)을 입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甲은 부상 치료기간인 2021년 3월 8일부터 2024년 2월 23일까지 생업인 제과점 운영을 하지 못하였다. 한편 乙은 훈련 당일 예비군 훈련장에서 사격훈련 중 총기오발사고로 부상을 입었다. 乙은 곧바로 병원으로 후송 후 수술을 받았고, 이후 통원치료를 계속 받아오다가 해당 상이(傷痍) 후유증으로 인해 2023년 12월 8일에 사망하였다.

— <보 기> —

- ㄱ. 甲의 부상은 예비군 훈련 종료 후 귀가 중에 발생하였지만, 부상 치료기간(2021. 3. 8. ~ 2024. 2. 23.)을 지급기간으로 하여 휴업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 ㄴ. 육군참모총장이 甲에 대한 휴업 보상금의 지급액을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수임군부대의 장은 육군참모총장에게 휴업 보상금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 ㄷ. 甲은 예비군 훈련 종료 후에 부상을 입은 것이므로 「군인 재해 보상법」 제33조에 따른 장애보상금의 지급액과 지급절차에 준하여 지급하는 장애보상금 지급대상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 ㄹ. 乙이 통원치료 중 장애보상금을 지급 받은 경우, 사망으로 인한 사망보상금 지급시 이미 지급된 장애보상금은 공제하지 않는다.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문 36. 예비군법령상 보상 및 치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수임군부대의 장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에게 사망증명서 또는 부상증명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지휘계통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사망확인서 또는 부상확인서를 작성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예비군 훈련 중 사망한 사람의 유족’과 달리 ‘예비군 훈련 중 부상을 입은 사람의 가족’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 대상자에만 속한다.
- ③ 수탁경찰서장은 동원명령 또는 훈련소집에 응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 중에 부상을 입은 예비군대원을 군(軍) 의료시설에서 치료받게 할 수 없다.
- ④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어 전투에 준하는 임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사람의 경우에는 수행한 임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공상군경(公傷軍警)에 해당한다.

문 37. 예비군법령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훈련소집된 예비군대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비를 제외한 교통비 등 실비 변상을 할 수 있다.
- ② 직장예비군 중 75명으로 구성된 어민예비군 부대에 대해서 부대 운영을 위한 부대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③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은 소속 예비군대원을 상대로 그 지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나, 예비군은 편성된 조직체로서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있다.
- ④ 「예비군법」 제5조에 따라 동원된 사람에게는 동원된 기간에도 「병역법」에 규정된 전시근로소집을 할 수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포함)

문 3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중앙안전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국무총리는 위원장이 되고, 국가정보원장,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금융감독원장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은 위원이 된다.
- ㄴ.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ㄷ. 지역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의안을 검토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협의·조정 등을 위하여 지역위원회에 안전정책 조정위원회를 둔다.
- ㄹ.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ㅁ.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고, 지역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ㄱ, ㄷ, ㅁ

④ ㄴ, ㄷ, ㄹ, ㅁ

문 3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안전상황실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정보의 수집·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ㄴ. 지방국토관리청장은 재난에 관한 상황관리를 위하여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ㄷ. 누구든지 재난이 발생할 징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긴급구조기관,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를 받은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그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ㄹ.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구역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조치 및 수습 현황에 대해서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보고받은 사항을 확인·종합하여 즉시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ㅁ. 재외공관의 장은 관할 구역에서 해외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즉시 그 상황을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ㄱ, ㄴ

② ㄴ, ㅁ

③ ㄱ, ㄷ, ㄹ

④ ㄷ, ㄹ, ㅁ

문 4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무총리는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지침을 5년마다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국무총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기본계획을 종합하여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작성하여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후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확정된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중 그 소관 사항을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무총리로부터 통보받은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그 소관 업무에 관한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문 4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의 예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의 장은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상황에서 해당 기관·단체의 핵심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단체 및 민간업체는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관·단체 및 민간업체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 ③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정관리대상지역을 안전도가 미흡한 경우에는 C등급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④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C등급에 해당하는 특정관리대상지역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문 4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의 대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의 발생으로 인하여 통신이 끊기는 상황에 대비하여 미리 유선이나 무선 또는 위성통신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긴급통신수단을 마련하여야 한다.
- ㄴ.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 재난관리기준을 제정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ㄷ. 다수의 재난관리주관기관이 관련되는 재난에 대해서는 관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작성하여야 한다.
- ㄹ. 위기관리 매뉴얼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ㅁ.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매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훈련참여기관과 합동으로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훈련일시, 장소 등 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훈련일 15일 전까지 훈련참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ㄱ, ㄴ, ㅁ

② ㄱ, ㄷ, ㄹ

③ ㄴ, ㄹ, ㅁ

④ ㄷ, ㄹ, ㅁ

문 4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의 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행정안전부장관이 본부장이 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둔다. 이 경우 해당 재난과 관련한 민간전문가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특별대응단장등이 된다.
- ㄴ.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재난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난을 수습하기 위한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신속하게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장은 해당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된다.
- ㄷ.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지역사고수습본부를 운영할 수 있으며, 지역사고수습본부의 장은 해당 지역 긴급구조기관의 장이 된다.
- ㄹ. 시·군·구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관할 시·군·구의 부단체장이 되며,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긴급구조에 대해서는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의 현장지휘에 협력하여야 한다.
- ㅁ.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의 효율적 수습을 위하여 중앙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ㄷ, ㅁ

④ ㄱ, ㄴ, ㄹ, ㅁ

문 4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재난상황 등을 기록한 재해연보 또는 재난연감을 작성하여야 한다.
- ㄴ. 행정안전부장관은 위험물 사고와 관련하여 대규모 재난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사회재난 또는 재난상황 등을 기록하여 관리할 특별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재난에 관하여 재난수습 완료 후 수습상황과 재난예방 및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의견 등을 기록한 재난백서를 신속히 국무총리에게 제출·보고하여야 한다.
- ㄷ. 행정안전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 ㄹ. 재난원인조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조사와 본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본조사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발생지역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기관 등에 정밀분석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 ㅁ.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할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정한 안전관리헌장을 제정·고시하여야 한다.

① ㄱ, ㄴ

② ㄷ, ㅁ

③ ㄱ, ㄷ, ㄹ

④ ㄴ, ㄹ, ㅁ

문 4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이 효율적으로 수립·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축제 안전관리 메뉴얼을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지도·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에게 시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연성 가스 등의 폭발성 물질을 사용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다중의 참여가 예상되는 지역축제로서 개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참여 예상 인원의 규모와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문 4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아래 사례와 관련하여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甲은 배우자 乙, 모친 丙과 함께 살던 중, A시의 시설인 어린이공원에 재난이 발생하자 긴급구조활동을 위해 자원봉사자로 참여하였다. 시설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100만원 상당의 甲의 휴대폰이 파손되었고, 복구 과정 중에 입은 부상으로 인하여 甲은 사망하였다.

— <보기> —

- ㄱ. 甲의 파손된 휴대폰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 참여 당시 휴대폰의 교환가격으로 보상한다.
- ㄴ. 甲의 유족으로 乙과 丙만이 있다면, 유족에 대한 보상금은 乙과 丙에게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지급한다.
- ㄷ. 乙이 포태 중이었다면, 그 태아의 보상금 지급 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 ㄹ. 甲에 대한 보상금은 A시가 부담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문 4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보험사업자가 재난안전의무보험에 대한 가입 요청 또는 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보험계약 등을 해제·해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는 것은?

- ① 의무보험가입대상을 양도한 경우
- ② 의무보험가입대상이 다른 재난안전의무보험에 이중으로 가입되어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가입의무자가 하나의 가입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③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가입의무자가 법령에 따른 정기검사 등 의무보험가입대상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그 의무의 이행을 요구했음에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 ④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가입대상에 대한 신고수리가 변경되어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보험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문 4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밑줄에 해당하지 않는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운영 등)
 ③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통지나 응급조치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문자나 음성 송신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3. (이하 생략)

동법 시행령 제46조의2(주요 전기통신사업자 등) ① 법 제38조의2 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전기통신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전기통신 역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1. (이하 생략)

— <보기> —

ㄱ. 초고속인터넷 역무

ㄴ. 주파수를 배정 받아 제공하는 역무 중 이동전화 역무

ㄷ. 주파수를 배정 받아 제공하는 역무 중 가입자가 5만명 이상인 주파수공용통신 역무

ㄹ.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부가통신역무 중 정보통신서비스의 유형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5만명 이상인 부가통신역무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ㄷ, ㄹ

문 4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긴급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방면현장지휘대는 2개 이상 4개 이하의 소방서별로 소방본부장이 1개를 설치·운영한다.
- ㄴ. 긴급구조지원기관에서 긴급구조업무와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자 및 관리자가 받아야 하는 긴급구조교육 중 정기교육은 신규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받아야 한다.
- ㄷ. 해당기관의 긴급구조 분야와 관련되는 「자격기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민간자격을 보유한 사람은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유지하여야 하는 전문인력에 해당한다.
- ㄹ. 재난대비훈련의 결과가 소방청장이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은 다음 연도와 그 다음 연도에 한하여 긴급구조활동에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의 능력에 대한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 ㅁ. 소방청장은 긴급구조기관이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한 능력을 평가하는 데에 필요한 평가지침을 반기별로 수립하여 다른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ㄹ, ㅁ

문 5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맞는 것(○)과 맞지 않는 것(X)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ㄱ. 甲은 2020년 2월 5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5 제2항을 위반하여 7일간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최초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후, 2023년 3월 20일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되어 20만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 ㄴ. 乙은 2021년 3월 3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대피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최초로 과태료부과 처분을 받은 후, 2024년 2월 3일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되어 50만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 ㄷ.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 丙은 2024년 5월 10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6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행위가 적발되었으나, 丙의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어 20만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 ㄹ. 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제1항제2호에 의거 위험구역 내에서 2021년 5월 1일부터 2024년 4월 29일까지 사이에 3개월 이상 퇴거명령을 따르지 않는 행위를 3회 위반한 것이 적발되어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u>ㄱ</u>	<u>ㄴ</u>	<u>ㄷ</u>	<u>ㄹ</u>
①	○	○	X	X
②	X	X	○	○
③	○	X	○	X
④	X	○	X	○